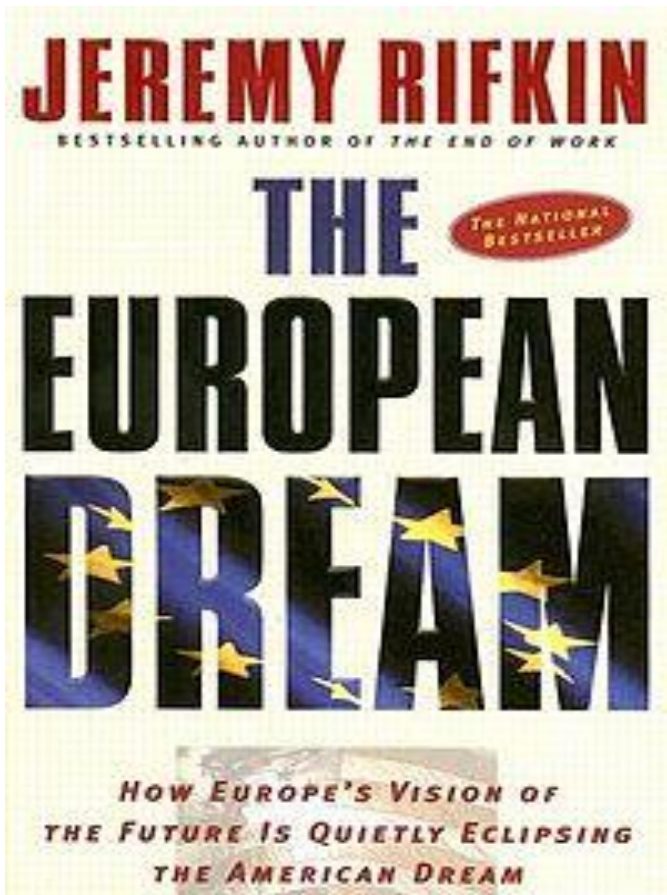


영국의 EU 탈퇴

- EU는 지속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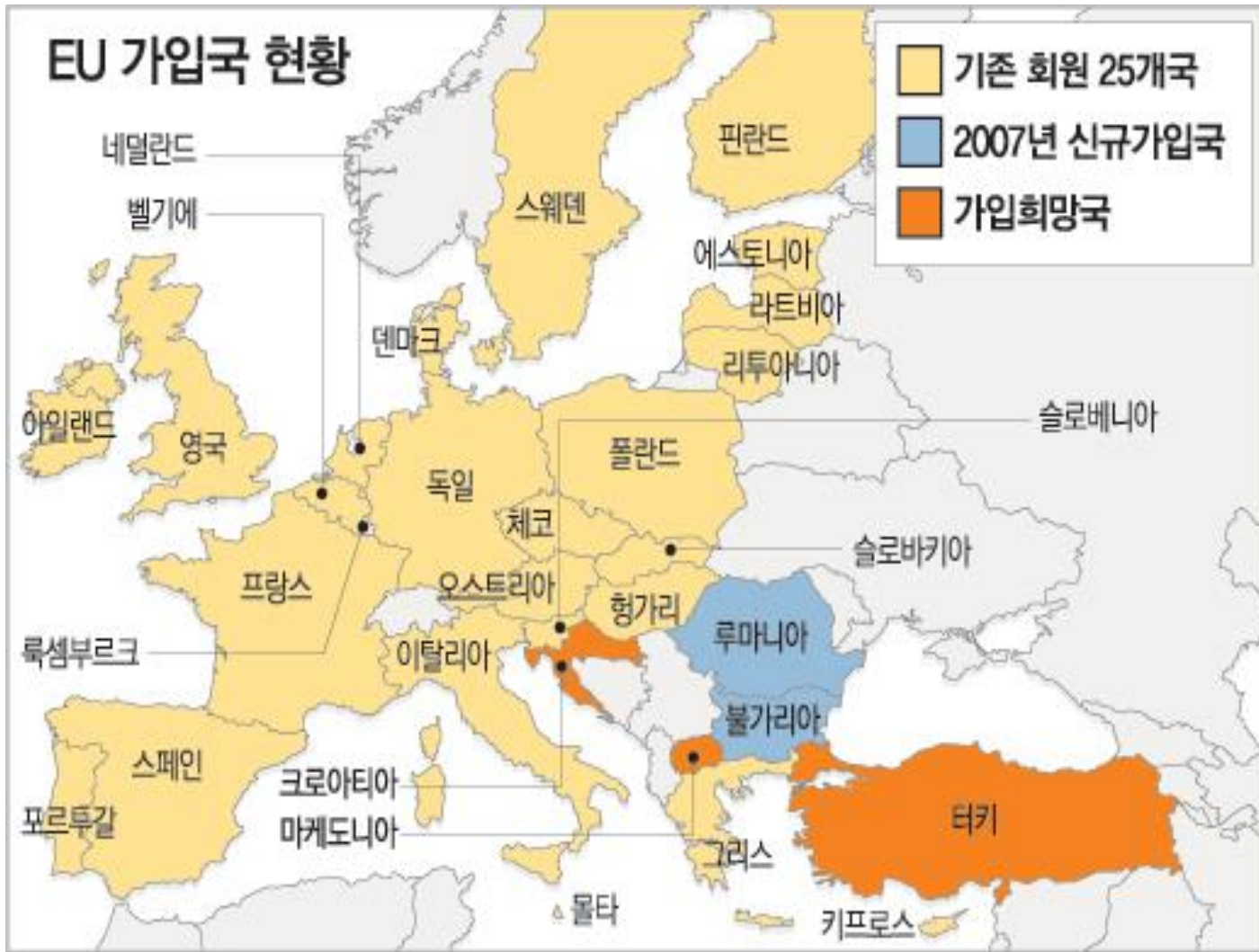
정승일

2016.7.21





EU 가입국 현황





They've taken all our fish and money through the y

George Garrow
On Twitter Facebook
YouTube Liveleaks
and more

MASS IMMIGRATION



"We get new/cheap labour"

"We get new Labour voters"

YOU GET SCREWED

브렉시트 찬성파

난민 유입
막을 수 있어
실업률 낮아지고
영국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다



Vs

브렉시트 반대파

영국이 EU에서
탈퇴할 경우
유럽과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브렉시트' 찬반투표 시작

🇬🇧 영국 EU 탈퇴 2년 후 경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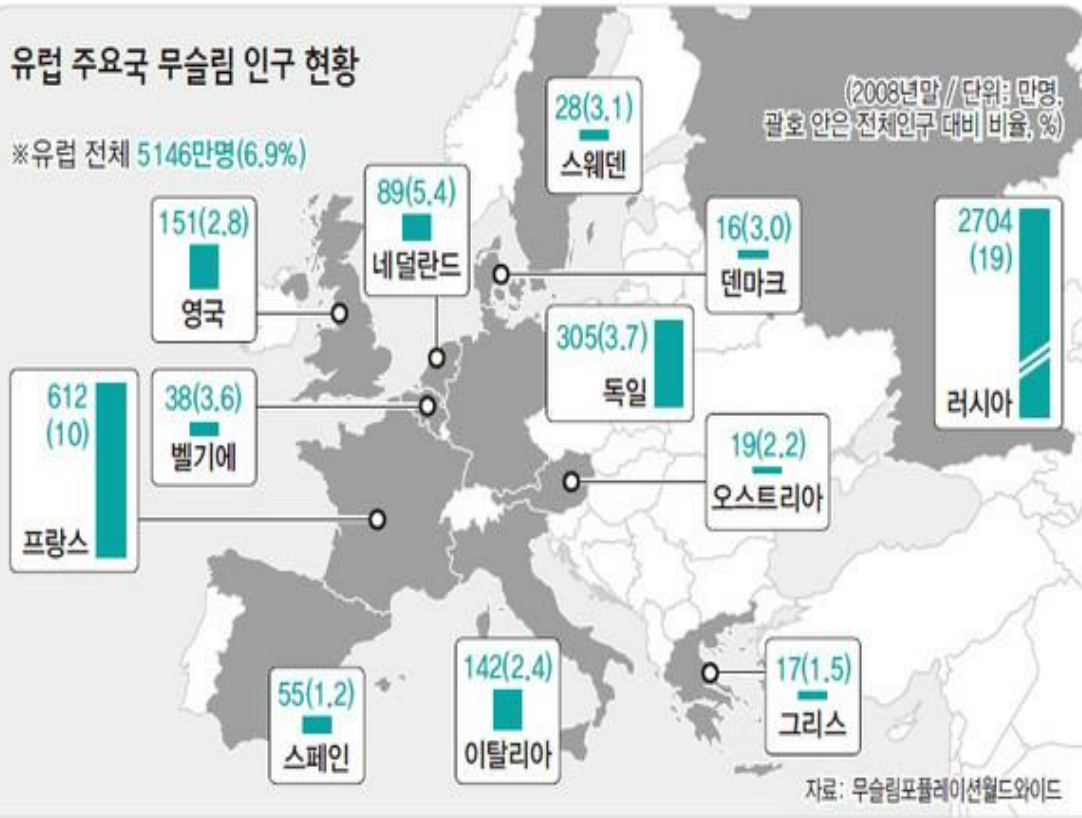
YTN



자료: 영국재무성

유럽 주요국 무슬림 인구 현황

※유럽 전체 5146만명(6.9%)



<유럽 주요국 및 도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무슬림의 비율>



※ 주요 도시별 무슬림 점유율



(자료 : The View Forum 2009년)





아프리카 政情 불안으로
12만명 지중해 통해 EU 밀입국

감시 피해 최대한 작은배 이용
밀항선 전복 사고 급증

해상 밀입국 관문 이탈리아
“구조에만 月 120억원 부담”
北유럽 국가들과 갈등도 심화

유럽 주요 밀입국 경로 2013년 기준

- 유럽연합
- 경로국
- 위기국
- 육로
- 해로



지난해 유럽연합 국가별 난민 접수 건수 단위: 건

독일	7만6165건
프랑스	6만1715
스웨덴	4만5005
이탈리아	2만3565
영국	2만2355
벨기에	2만1390
오스트리아	1만6610
스위스	1만6595
네덜란드	1만5590
그리스	1만3080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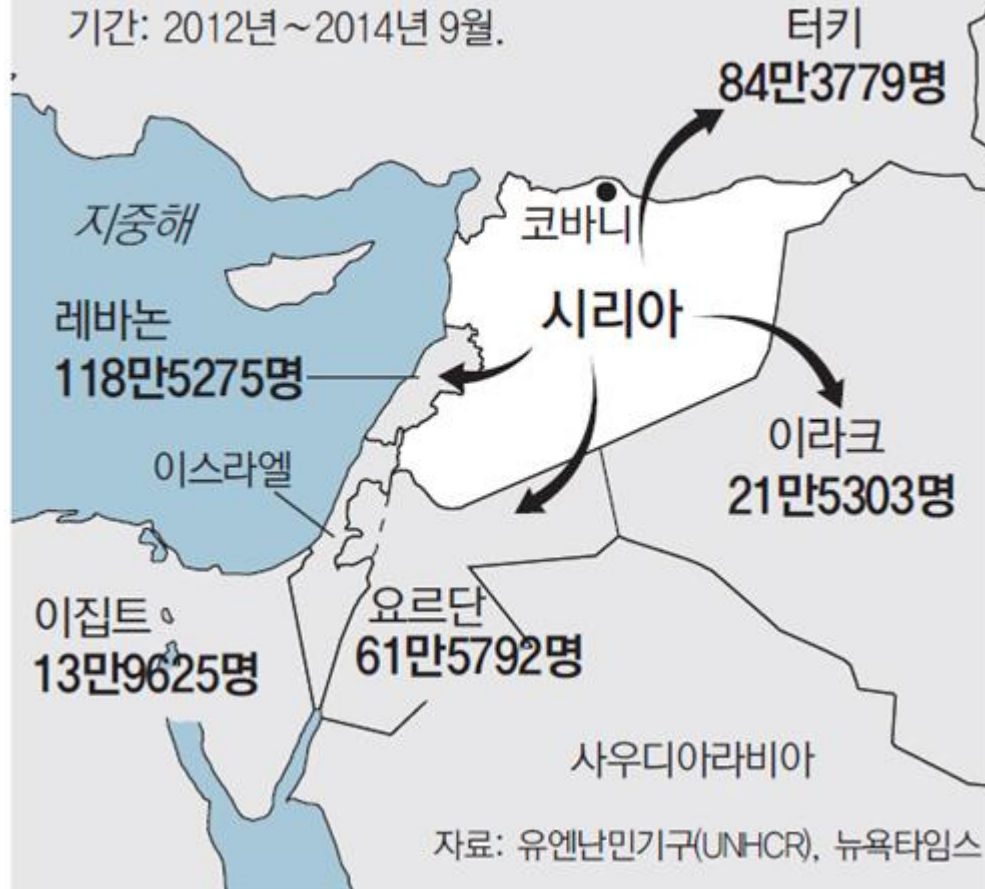


자료: 이탈리아·모로코 내무부, UNHCR, 유럽연합 국경관리청(Frontex)
그래픽 = 조선일보 디자인편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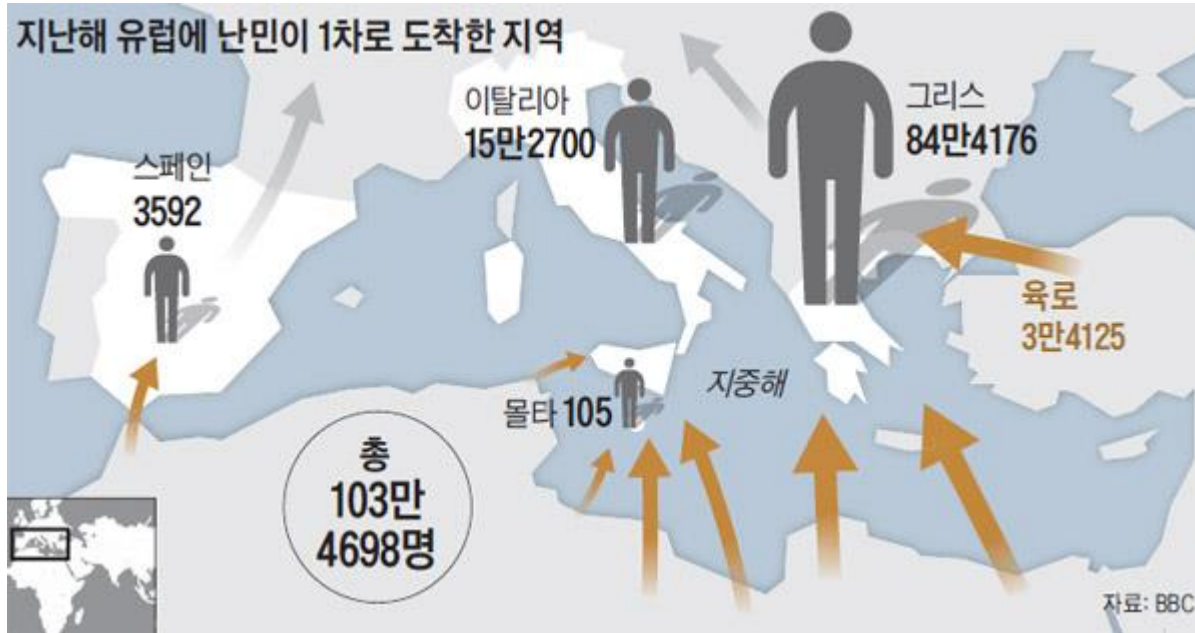
자료: UNHCR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 현황

기간: 2012년~2014년 9월.



지난해 유럽에 난민이 1차로 도착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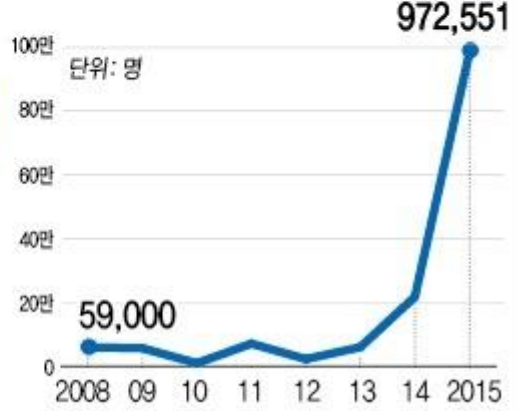
올해 유럽 유입 난민 100만명

올해 유럽 유입 난민
총 1,006,551명
12월 21일 기준

▶해로 이용
972,551명
▶터키 육로 이용
34,000명
▶실종, 사망
3,625명



▶바다 넘어온 난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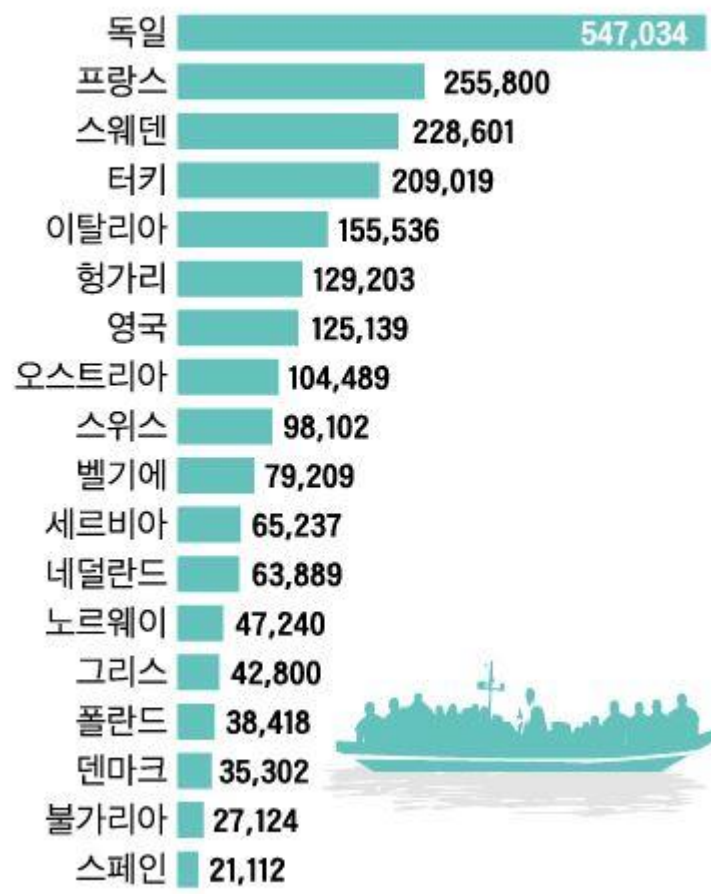
나이지리아 2 파키스탄 2
소말리아 2
말리 1 잠비아 1 수단 1

연합뉴스

자료/유엔 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유럽 각국에 접수된 난민들의 망명신청

(단위:명, 2011년~2015 상반기)



자료: 월드뱅크, 출처:뉴욕타임스

박영석 기자 / 2015122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① 그리스: 2012년 설치 완료
 - ② 불가리아: 연내 설치 예정
 - ③ 프랑스: 설치 완료
 - ④ 헝가리: 일부 설치 완료, 연장 설치 중
 - ⑤ 우크라이나: 2018년까지 설치 예정
 - ⑥ 에스토니아: 2018년 설치 시작할 예정
 - ⑦ 오스트리아: 설치 고려 중
 - ⑧ 슬로베니아: 설치 고려 중
- 자료: 워싱턴포스트

난민 관련 EU의 주요 협약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송환 금지)
1985년	셴겐조약 (EU 국경에서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현재 26개국 가입)
1997년	더블린조약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 의무화)
2015년	난민쿼터제 (국가별로 난민을 강제할당하는 방식이지만 각국 반대로 난향)

유럽 쉥겐조약 가입국



셥겐조약: 26개 유럽 국가가 가입한 셥겐 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고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경 TEST 용어



셥겐조약

Schengen Agre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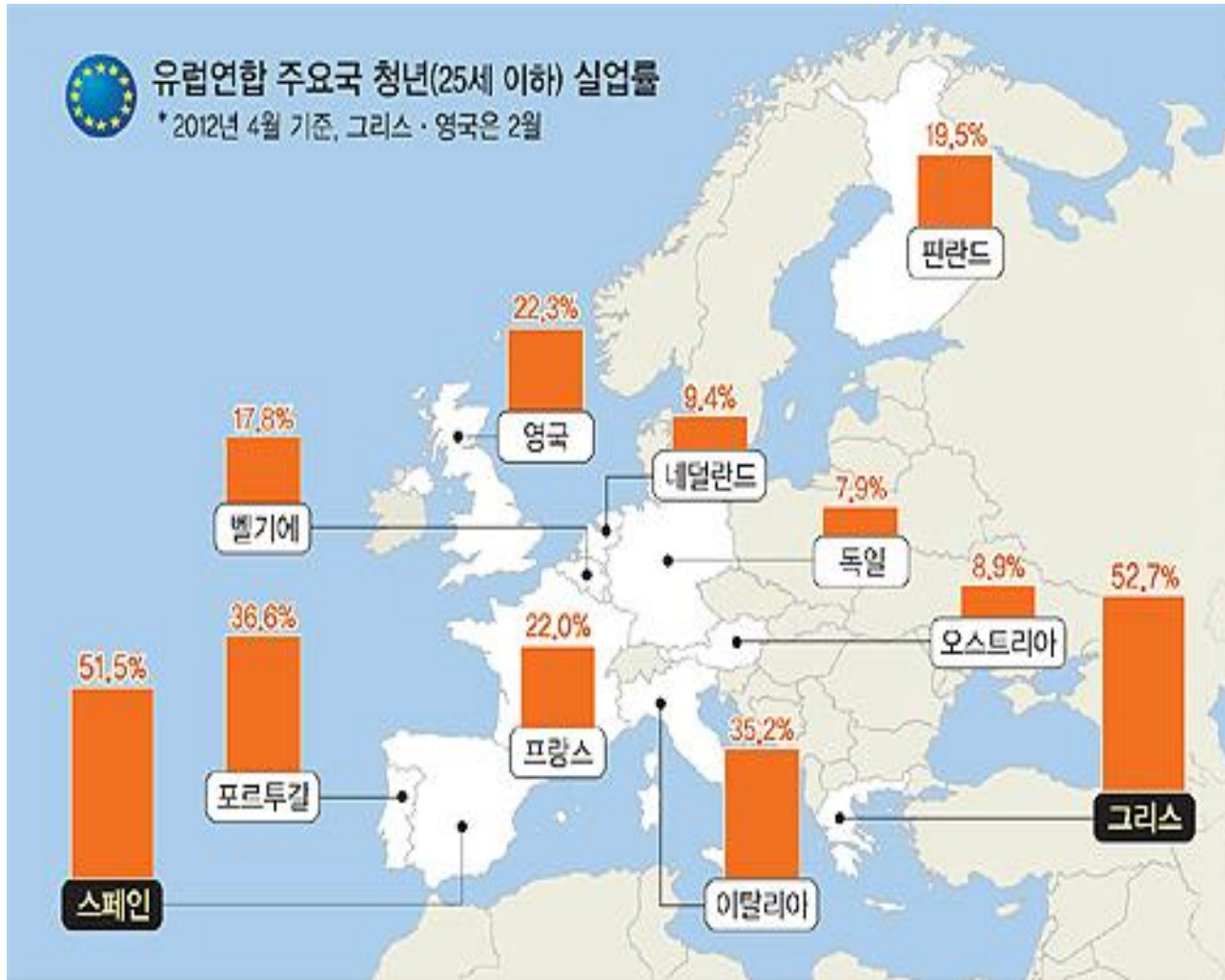
Free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한 번만 입국심사를 마치면 전체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조약을 말한다.



유럽연합 주요국 청년(25세 이하) 실업률

* 2012년 4월 기준, 그리스·영국은 2월



'Schengen 조약' : 인간(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 유럽을 다녀온 여행객이라면 '한 국가를 다녀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유럽 나라에서 국경을 건널 때 여권이나 보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 이게 가능한 것은 검문검색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도록 한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 덕분이다. 조약이 탄생한 것은 딱 30년 전인 1985년 6월 14일.
- 유럽경제공동체(EEC)회원국인 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5개국 대표들이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쉥겐 근처 모제르 강에 떠 있던 '프린세스 마리 아스트리드'호 선상에 모였다.
- 이들은 5개국 국경에서의 검문검색과 여권검사 면제에 합의하고 조약문에 서명했다. 이렇게 출발한 쉥겐조약은 세를 불려 현재는 모두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조약국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롭다.
- 쉥겐 조약이 유럽 통합의 상징이자 유럽행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효자로 불리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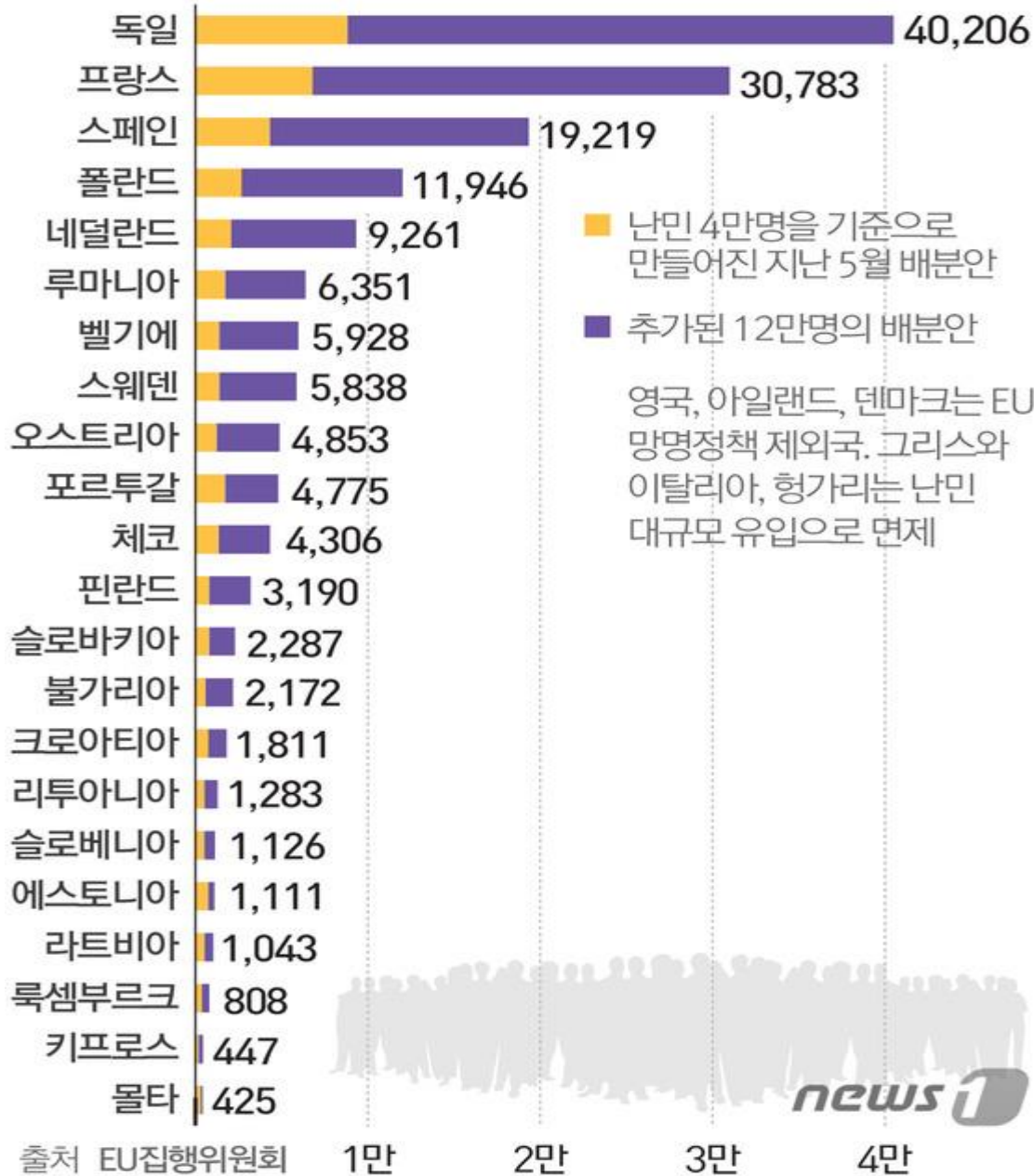
시리아 난민과 IS : 쟁쟁한 조약

-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한 파리 테러로 '하나의 유럽' 건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 난민-테러범들이 프랑스-벨기에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테러를 계획, 실행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연합(EU)의 난민 16만명 할당 계획



EU-독일/프랑스의 이민자 할당 기 획

- EU 경제가 불안정하고 실업자의 숫자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 중동/아프리카 난민들, 입국자들이 매년 수십만 명이 EU로 유입
- 유럽 전역에서 인종주의 정치 세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독일/프랑스에서 시리아 난민들 유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 네오나치/민족전선
- '복지국가를 오직 스웨덴인에게만'을 주장하는 '스웨덴인 민주당'이 여론조사 1등

• EU 각국의 경제력과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난민

영국 보수당 내 EU 탈퇴파의 주장/생각

- 온갖 노동규제, 금융규제, 복지 의무 규제 등을 강요하는 독일/프랑스(유럽대륙)
- EU 탈퇴로 탈규제-(신)자유주의 이념의 극대화

• 큰 경제 규모와 경제력을 가진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큰 할당

EU를 이끄는 이념/기치는 (신)자유주의인가?

- 독일 기민당/서민당 + 프랑스 공화파/사회당 : Social liberal + 질서 자유주의
- 노동규제, 금융규제, 복지 의무 등이 있는 자유주의

• 여구·캐머러 스사이 바

난민 유입에 우파 득세하는 유럽 정치지형

영국독립당 지지율 급등,
보수당·노동당 모두
폐쇄적 이민정책 지지



헨리에테 레커 켈른 시장 당선자
기독교민주당 지지 받는
무소속 후보 켈른 시장 당선

총선서 보수야당연합 승리



영국

덴마크



안제이 두다 대통령
40대 극우파 대통령 당선



프랑스

독일

폴란드



빅토르 오르반 총리
피데스당, 난민 유입
차단으로 지지율 반등 시도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獨, 여당(정의개발당) 지지
난민 통제 시 EU 가입 지원

자유당, 빈 시장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

국민전선, 12월 프랑스 북부
노르파드칼레피카르디주 지방선거
승리 예상

그리스

터키



토니 브루너
스위스국민당 대표
민족주의 성향
스위스국민당 총선 승리

총선서 극우 파시스트
황금새벽당 선전





Aylan Kurdi, drowned Syrian boy, was denied Canadian asylum



DAILY SABAH EUROPE

Charlie Hebdo mocks the drowned Syrian toddler Aylan Kurdi

SI PRÈS DU BUT... 2 MARCHÉS ENFIN POUR LE PAYS ?

YONHAP NEWS



이슬람 국가(IS)가 최근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꼬마 쿠르디를 선전 포스터에 이용.

'다룰 이슬람(이슬람 지역)을 도망칠 때 닥칠 위험'이라는 제목과 함께 실렸으며, "IS를 피해 떠나는 무슬림들은 알라신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며 선전했다.



The repeated events of Syrians and Libyans dying on the shores of Turkey, Libya, and Italy, or even on the highways of Austria, is one that should awaken the heart into reflecting upon the issue of hijrah.

[Indeed, those whom the angels take [in death] while wronging themselves – [the angels] will say, "In what [condition] were you?" They will say, "We were oppressed in the land." The angels will say, "Was not the earth of Allah spacious [enough] for you to emigrate therein?" For those, their refuge is Hell – and evil it is as a destination. Except for the oppressed among men, women and children who cannot devise a plan nor are they directed to a way – For those it is expected that Allah will pardon them, and Allah

implemented somewhere, it is not Dārul-Islām" [Ahkām Ahl adh-Dhimmah]. This is evident, as the Sahābah did not consider the lands overcome by the false prophets or the resistance against zakāh to be anything but dārul-harb. The fuqahā' after them did not consider the lands ruled by the Tatar or 'Ubaydī rulers to be Dārul-Islām, for although these rulers claimed Islam and ruled by some of its laws, they committed apostasy by abandoning some of its laws or teachings. Accordingly, moving to the lands of Āl Salūl or the Sahwāt is not hijrah, as the rulers of these lands – in addition to them allying with the crusaders and apostates against Islam – abandon and resist many of the laws of the Shari'ah. There is no wālā' and barā' there except on a nationalist basis.



영국 총리의 마음을 바꾼 3살 시신 사진, 그리고 메르켈

작성일 Sep 4th, 2015 | by 김홍조

시리아 | 세살배기 난민 시신 | 독일 메르켈 총리 | sns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 | 유럽 | 영국 캐머런 총리
문화



익사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 시신이 터키 해변에서 발견돼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3일(한국 시각) 국내외 언론들은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예이란 쿠르디(3)가 이날 오전 터키의 휴양지인 보드룸의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었드린 모습으로 발견된 이 아이는 최근 그리스 코스섬으로 가다가 터키 해안에서 전복된 난민선 탑승객 사망자 12명 중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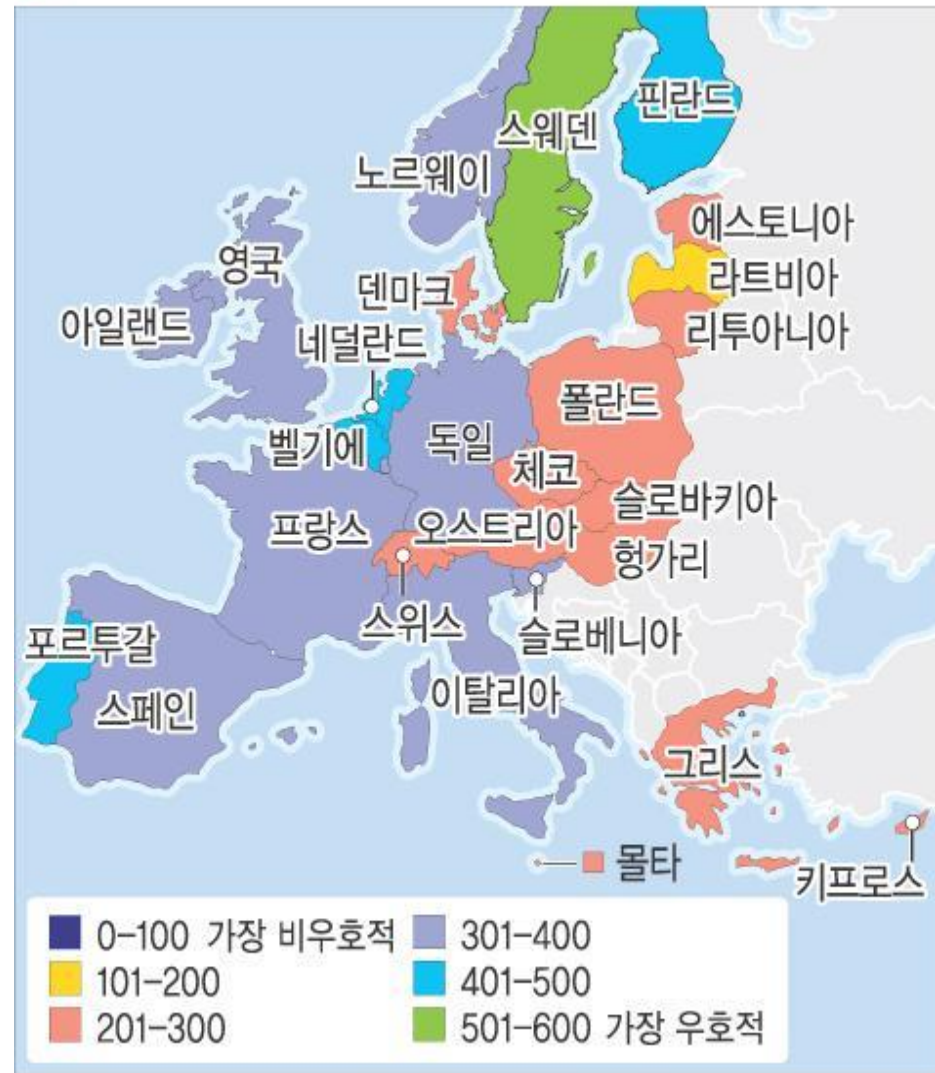
***EU회원국 '난민쿼터제' 찬반 현황**

구분	국가	PMI(8월)	PMI(전월 대비)	실업률(7월)
찬성	독일	53.3	1.4	4.70%
	프랑스	48.3	-1.3	10.40%
중립	스위스	52.2	3.5	3.30%
	덴마크	61.7	7.2	4.60%
반대	스페인	53.3	-0.4	22.20%
	이탈리아	53.8	-1.5	12%
	그리스	39.1	8.8	25%
	체코	56.6	-0.9	5.10%
	헝가리	50.7	0.8	6.80%

유럽 각국의 반난민 장벽 건설 현황(괄호 안은 완공 시점)



■ 유럽연합(EU) 국가별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



〈자료 : BBC 인터넷홈페이지〉

**FREE MOVEMENT,
YES!
SOCIAL DUMPING,
NO!**

**WORKERS IN EUROPE
ARE SUFFERING
FROM SOCIAL DUMPING**



**CONFEDERATION
SYNDICAT
EUROPEAN
TRADE UNION**

**E.U.
START THINKING
AND
STOP
SOCIAL DUMPING**









They've taken all our fish and money through the y

George Garrow
On Twitter Facebook
YouTube Liveleaks
and more

MASS IMMI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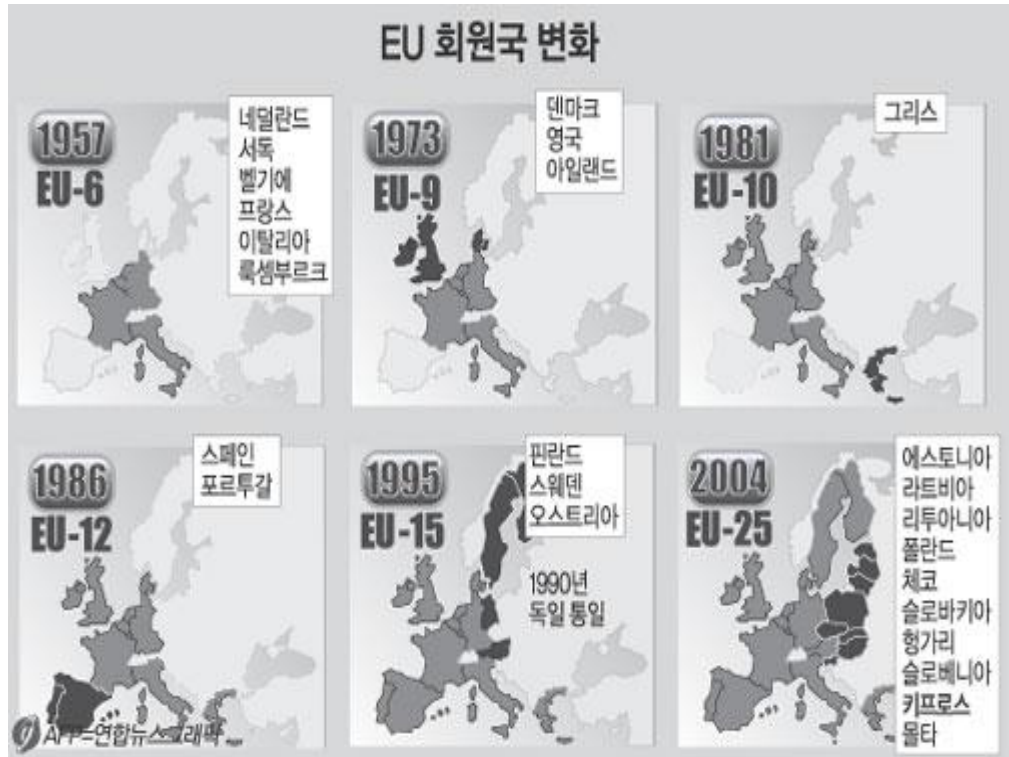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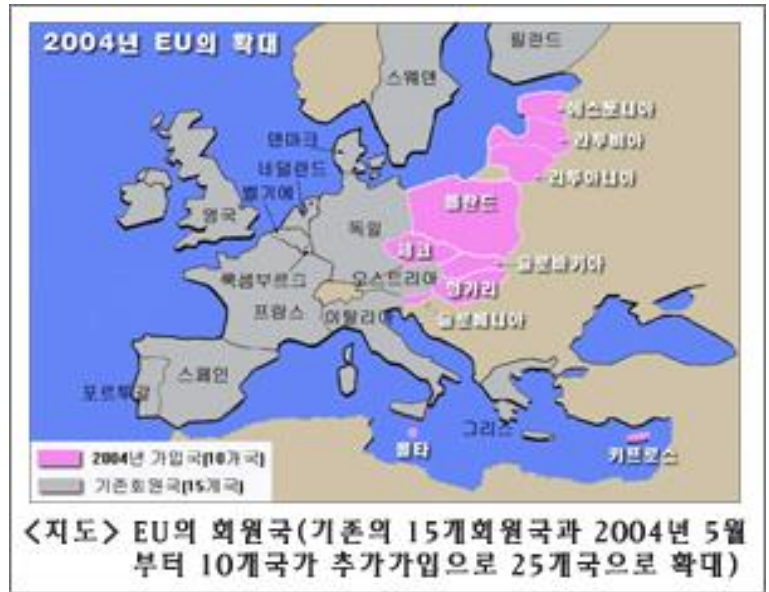
"We get new/cheap
labour"

"We get new Labour
voters"

YOU GET SCREWED



출신국으로 본 영국 내 이민자 수(명)
 자료: 영국 국가통계청(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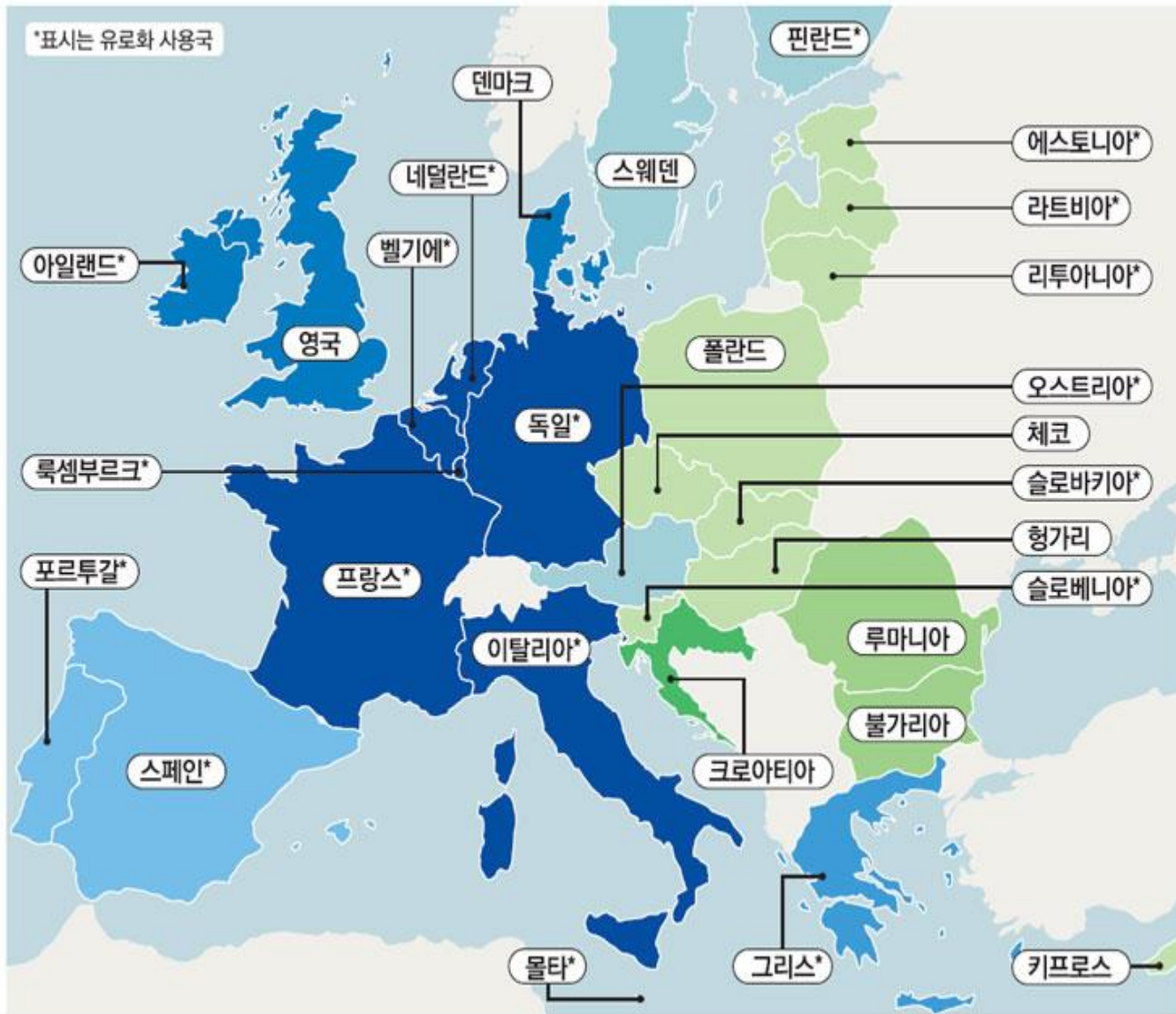
유럽 통합 주요 사건 연표

- 1951년 : 서유럽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 1958년 : 로마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 출범
- 1993년 :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EU) 설립

- 2004년 : 동유럽 10개국 대거 가입(EU 빅뱅)

- 2005년 : EU 통합헌법, 프랑스 · 네덜란드 등 부결로 무산

- 2007년 : EU 회원국 정상들, 리스본조약 채택
- 2008년 : 아일랜드 리스본조약 국민투표 부결
- 2009년 : 아일랜드(10월) 국민투표로 리스본조약 가결, 폴란드(10월) · 체코(11월) 비준으로 EU 회원국 전원 비준
- 2009년 12월 1일 : 리스본조약 발효



유럽연합(EU) 어떻게 확장했나

1951년

- ▶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1967년 유럽공동체(EC) 발족

1973년

- ▶ 영국·덴마크·아일랜드

1981년

- ▶ 그리스

1985년

- ▶ 스페인·포르투갈 *1993년 EU 발족

1995년

- ▶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2002년 유로화 도입

2004년

- ▶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슬로베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몰타·키프로스

2007년

- ▶ 불가리아·루마니아
*2009년 EU 주요 기구·기능 확장을 위한 리스본 조약 발표

2013년

- ▶ 크로아티아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11451001&code=970205
- 이민자 문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 최근 5년새 인도 출신은 10% 정도 증가했지만 폴란드 출신은 50% 이상 급증
- 폴란드가 EU에 가입한 2004년 이후 11년 만
- EU탈퇴를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IP)이 '무슬림 테러범'을 비난하지만 실상 영국 내 외국인 이주민 대부분은 동유럽, 아일랜드, 인도·파키스탄 출신
- 영국 2000-2015년간 매년 EU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
- EU 평균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 : 원인은?
-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중국/폴란드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의 자유무역 확대로 값싼 물품이 대거 유입됐고, 국경 간 노동력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선진국 중하층의 소득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 폴란드인들이 영국에서 주로 하는 일은 **건설, 세차, 식당·가게 점원, 배관공** 같은 직종이다.
- 변기나 배수구가 막히면 이전에는 몇주씩 기다려야 **했으나 폴란드 배관공들은 밤중에도 달려와 해결해준다.**
- 폴란드인들은 저임금에 성실하고 학력까지 높아 영국 사회에 빨리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서비스산업 문화를 바꿔놨다.**
- 일례로 영국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은 운전자가 스스로 기계를 사용해 세차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는데 **폴란드인들은 손세차로 바꾸었다. 한꺼번에 서너 명이 붙어 실내까지 순식간에 세차를 해 주고도 요금은 매우 싸다.**
- 한인 교민들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런던에서 유일하게 한국보다 싼 서비스 요금은 세차뿐일 것”이라고 전했다.

- 영국에서 의사를 방문하려면 보통 2주는 기다려야 했다. 진료도 아침 늦게 시작해 오후 4시면 마쳤다.
- 폴란드 의사들은 아침과 늦은 오후는 물론 토요일에도 진료를 해 대기 시간이 현격히 줄었다.
- 캐머런 정부는 이를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고 있다.
- 폴란드인들은 소비자+고용주의 환영
- 영국 저소득 노동자들과는 마찰 → 일자리를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
- 복지국가 사회보장 비용도 불만
- EU 국민은 영국에서 석달만 일하면 영국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로부터 자녀보조금, 노동보조금, 집세 보조금 등도 받는데, 많은 경우 가구당 월 3500파운드(약 600만원)에 달한다.
- 영국인들은 폴란드인들이 일자리도 빼앗고 복지+세금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덕에 소비가 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 영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이 됐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 폴란드인들이 대거 들어온 뒤 반발이 일자 영국 정부는 루마니아·불가리아가 2007년 EU에 가입한 뒤 영국에 들어올 수 있는 시한을 억지로 늦췄다.
- 루마니아, 불가리아인들의 영국 내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가 2014년 1월에야 풀어줬다.
- 하지만 루마니아인은 2년여 만에 영국 내 5위의 이민자 공동체로 떠올랐다.

- 반이민 정서에 기름을 부은 것은 터키.
- 터키는 오래 전부터 EU 가입을 원해 왔지만 이슬람국가인 까닭에 반감을 가진 회원국들이 많다.
- 최근 시리아 난민사태로 EU가 터키의 도움을 받으면서 터키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 터키가 회원국이 되면 폴란드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질적인 종교와 문화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퍼졌다.
- 캐머런 총리가 6/20일 “30년 내에 터키가 EU에 가입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반대 정서를 의식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11451001&code=970205#csidx0472dfeab47f462900cec45ef512d96





코빈: 문제는 이민이 아니라 긴축=반복지=반노동

- <http://www.sedaily.com/NewsView/1KXNX8NL8F>
- 코빈 당수의 BBC 인터뷰
-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경제 규모가 균형을 이뤄야”
- EU가 강요하는 긴축정책은 “남유럽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고의적으로 낮추는 정책”
- “이 경우 사람들은 자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 “영국 보수당의 케머런 수상 + 오스번 재무장관이 지난 6년간 추진한 긴축정책이 서민들의 분노를 유발”

-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EU와 연결돼 있다”며 “나는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지금 영국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분담금이 적어져 경제가 발전한다”는 Brexit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국이 EU를 떠난다고 해도 집값, 일자리, 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나오게 돼 있다”며 “(브렉시트 투표가 있는) 목요일이나 다음 날인 금요일이나 별 상관이 없다”며 비꼬았다.

반대표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자 환호하는 그리스 국민들



국제채권단 협상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자 반대표를 던진 그리스 국민들이 아테네 중심지의 분수대 난간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 출처: 로이터, 뉴스1, 동아일보 〉

EU 회원국과 유로존 분류

EU 회원국

유로화 사용 국가
(Euro zone 17개국)

- | | |
|---|---|
|  그리스 |  에스토니아 |
|  네덜란드 |  오스트리아 |
|  독일 |  이탈리아 |
|  룩셈부르크 |  키프로스 |
|  몰타 |  포르투갈 |
|  벨기에 |  프랑스 |
|  스페인 |  핀란드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아일랜드 | |




유로화 사용하지 않는 국가
(11개국)

- | |
|---|
|  덴마크 |
|  스웨덴 |
|  영국 |
|  불가리아 |
|  체코 |
|  헝가리 |
|  라트비아 |
|  리투아니아 |
|  폴란드 |
|  루마니아 |
|  크로아티아 |




EU 비회원국

- | | |
|--|--|
|  노르웨이 |  리히텐슈타인 |
|  스위스 |  아이슬란드 |

EU와 금융협정을 맺고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 또는 지역

- | | |
|---|------|
|  모나코 | 마요트 |
|  산마리노 | 생피에르 |
|  바티칸시국 | 에미클롱 |

EU와 금융협정을 맺지 않고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 또는 지역

- | | |
|---|---------|
|  안도라 | 데켈리아 |
|  몬테네그로 | 생바르텔르미섬 |
| 아크로티리 | 세인트마틴섬 |
|  코소보 | |

유로존(Euro zone):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쓰는 나라 또는 지역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서
1999년 1월 1일 유럽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출범 이후, 유로가 공식 도입되면서 탄생

※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 등의 나라에서도 법적 통화는 아니지만, 대도시의 국제적인 상점 등에서는 유로화 사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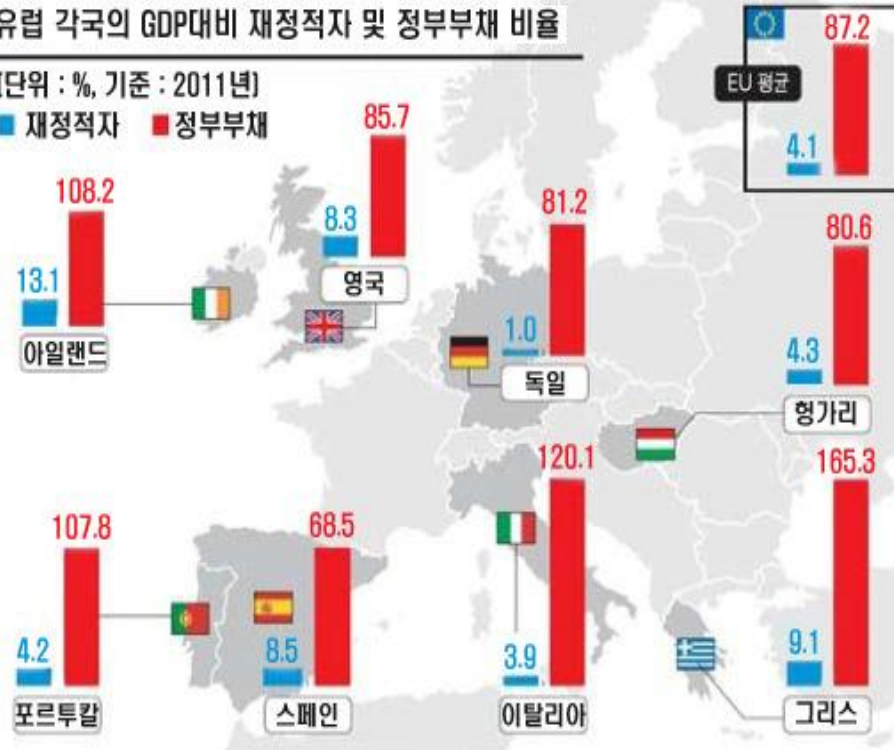


Μουτza demo

유럽 각국의 GDP대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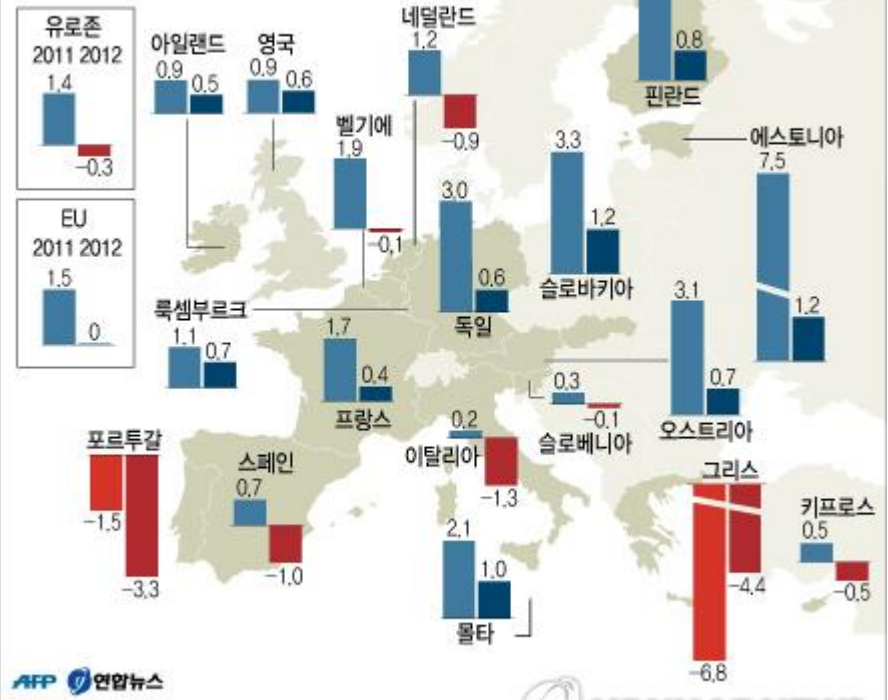
[단위 : %, 기준 : 2011년]

■ 재정적자 ■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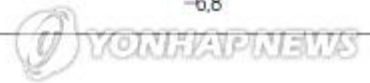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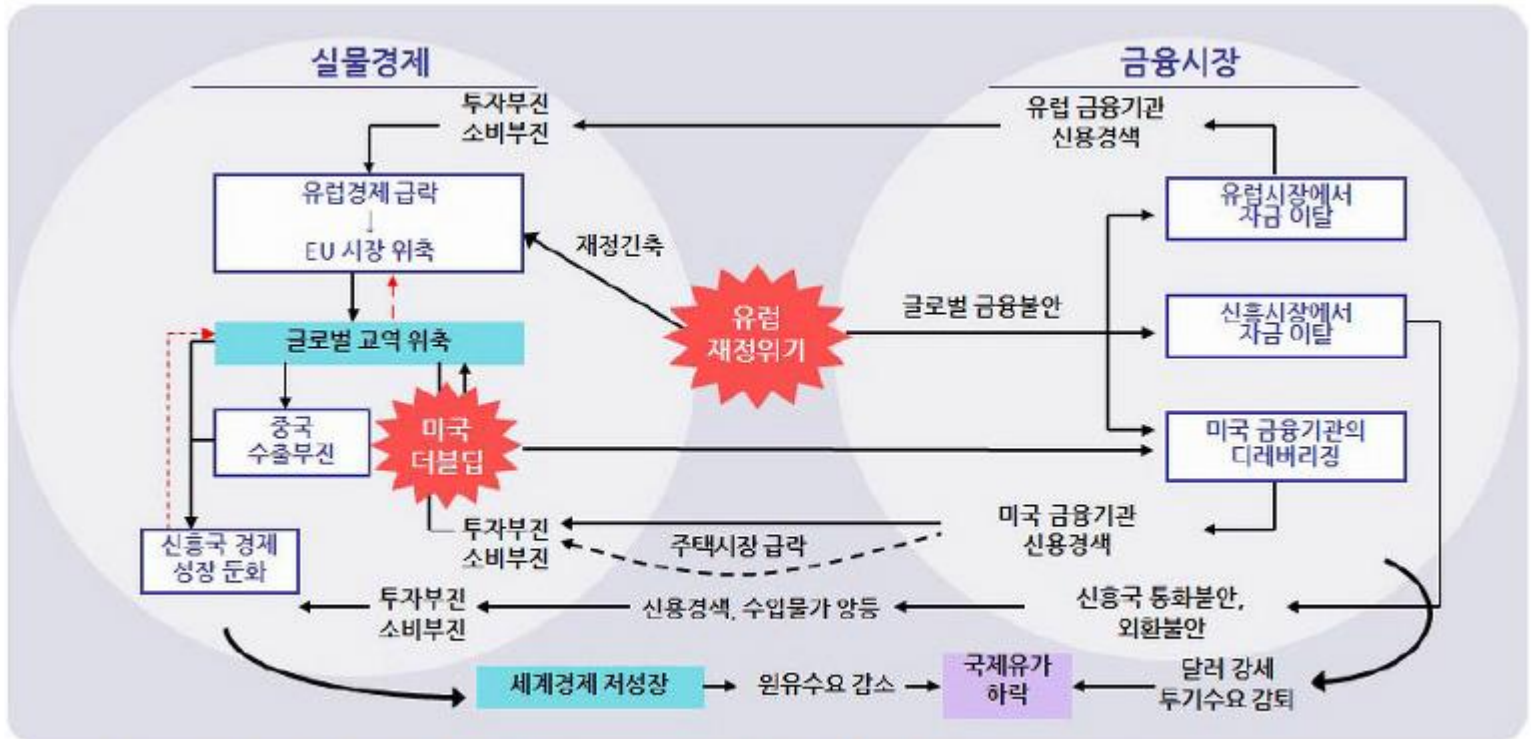
유로존 경제성장 전망

유로존-영국 GDP 성장률(%), 2011년 추정, 2012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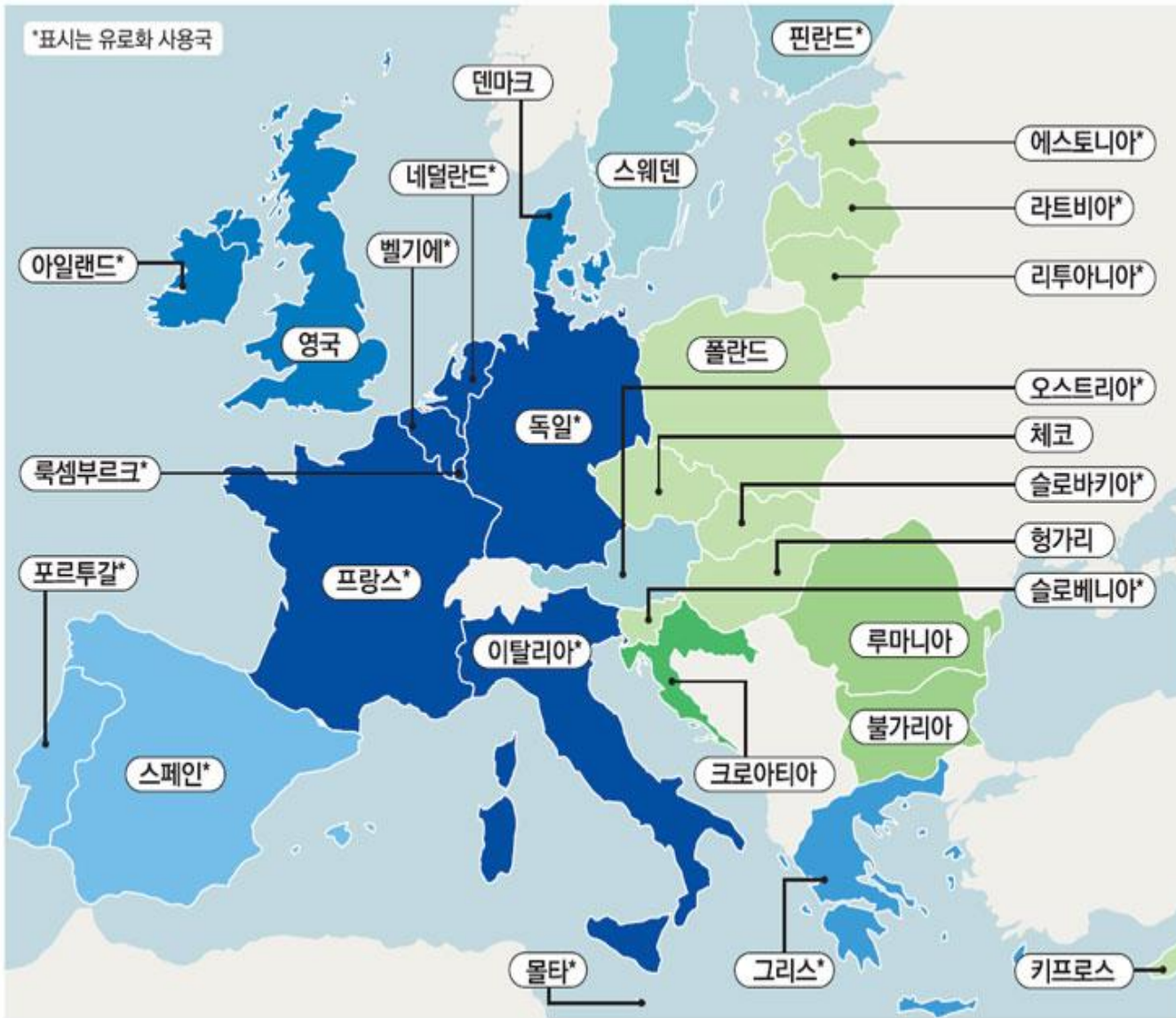
장예진 기자 / 20120224
@yonhap_graphics(트위터)





주: 화살표는 파급 경로, 실선과 점선은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실선>점선)





유럽연합(EU) 어떻게 확장했나

- 1951년
 - ▶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설립 *1967년 유럽공동체(EC) 발족

- 1973년
 - ▶ 영국·덴마크·아일랜드

- 1981년
 - ▶ 그리스

- 1985년
 - ▶ 스페인·포르투갈 *1993년 EU 발족

- 1995년
 - ▶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2002년 유로화 도입

- 2004년
 - ▶ 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헝가리·슬로베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몰타·키프로스

- 2007년
 - ▶ 불가리아·루마니아 *2009년 EU 주요 기구·기능 확장을 위한 리스본 조약 발표

- 2013년
 - ▶ 크로아티아

유로존 현황



- 유로존 19개국(도입 연도)
- ▲ 유로화 도입 거부
- 환율조정장치(ERM) II 대상국
- 기타 유럽연합(EU) 회원국
- EU 미가입 유로존 사용**



*1999년 도입됐지만 2002년 부터 유로화 사용
 **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유럽통화통합, 마스트리히트조 약,유로화의배 경및의의,유로 화의...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핵심은 유럽 통화 통합에 관한 일정과 유로존 가입 요건(환율안정성,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 유럽중앙은행(ECB) 설립, 서유럽연맹(WEU) 주축의 군사정책 수행, 유럽의회에 EC 조약 개정 승인권 부여, 유럽 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핵심은 유럽 통화 통합에 관한 일정과 유로존 가입 요건(환율안정성,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 유럽중앙은행(ECB) 설립, 서유럽연맹(WEU) 주축의 군사정책 수행, 유럽의회에 EC 조약 개정 승인권 부여, 유럽 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의 통화통합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핵심은 유럽 통화 통합에 관한 일정과 유로존 가입 요건(환율안정성,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 유럽중앙은행(ECB) 설립, 서유럽연맹(WEU) 주축의 군사정책 수행, 유럽의회에 EC 조약 개정 승인권 부여, 유럽 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핵심은 유럽 통화 통합에 관한 일정과 유로존 가입 요건(환율안정성,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 유럽중앙은행(ECB) 설립, 서유럽연맹(WEU) 주축의 군사정책 수행, 유럽의회에 EC 조약 개정 승인권 부여, 유럽 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핵심은 유럽 통화 통합에 관한 일정과 유로존 가입 요건(환율안정성, 재정적자, 물가상승률 등), 유럽중앙은행(ECB) 설립, 서유럽연맹(WEU) 주축의 군사정책 수행, 유럽의회에 EC 조약 개정 승인권 부여, 유럽 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로존 국가 부채 현황

공공부채 현황
(2014년 12월 현재)

□ 유로존 국가

60%
EU가 정한
공공부채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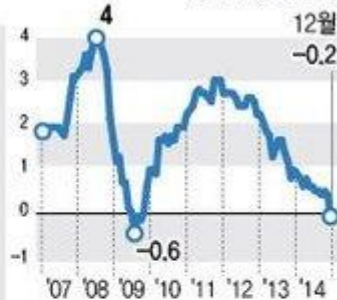
● 공공부채
(억 달러)

○ 공공부채 비율
(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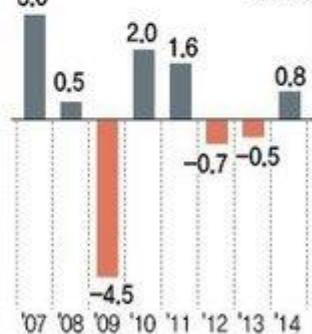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GDP) 추이

단위: %



자료/ EU통계청, 유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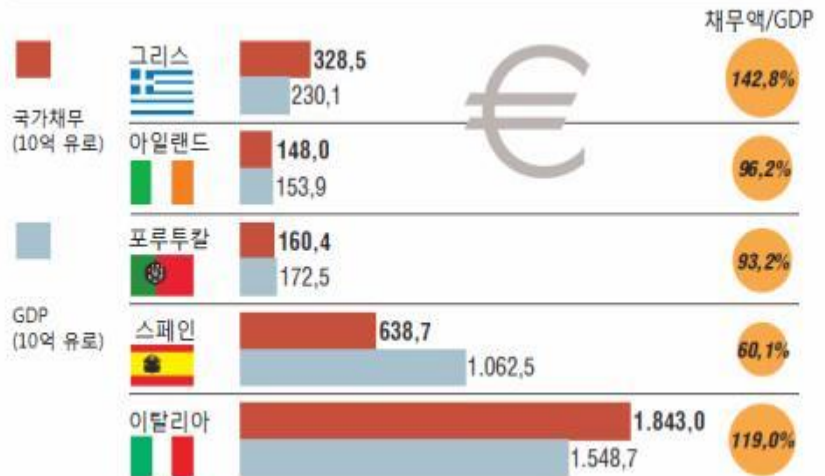
AFP 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0150123

페이스북 tune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유럽 주요 채무 위기국가의 채무 및 GDP



자료원: UE, Leggo

EU, 유로존, 쉥겐조약 탈퇴 관련 법적 장치 마련 촉구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03/0320000000AKR20130203017000009.HTML>
-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유럽연합(EU) 법규에 EU나 유로존 탈퇴와 관련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 뤼테 총리는 유로존 등 EU 주요 기구 관련 조약들엔 회원국의 탈퇴와 관련된 조항들이 아예 없거나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쉥겐 조약이나 마스트리히트조약, 리스본조약 등 EU의 주요 조약들을 추후 개정할 때 탈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뤼테 총리는 강조했다.
- 뤼테 총리는 앞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원하는 회원국이 유로존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EU의 정책들 가운데 특정 분야의 정책 관할권이 개별 회원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로폴리틱스'는 전했다.
- 그는 이 연설에서 "현재의 EU는 록밴드 이글스의 노래 '호텔 캘리포니아' 가사처럼 "언제든 원하면 체크 아웃은 할 수 있지만 결코 떠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법규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할 수 없고 EU 등의 기구에 한 번 넘어간 정책 관할권이 회원국에 반환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뤼테 총리의 발언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는 등 EU의 미래와 관련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유로존 국가들 내에선 그리스 등 이른바 '국가채무 불량 회원국들'을 유로존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유럽 내의 부자 나라들은 동구권 등 가난한 회원국 주민들의 대량 유입과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쉥겐 조약을 개정하거나 일부 국가를 퇴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371>
- 임운택 교수 칼럼
- 범유럽 차원의 '사회적 유럽' 프로젝트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
- 중산층 이하의 다수 노동자가 브렉시트에 찬성한 이유는?
- “정치적 유럽 통합 프로젝트는 1970년대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단일 시장 통합' 프로젝트로 둔갑되었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화려하게 재등장하였다. 이러한 시장 통합의 주역은 금융 자본이었다. 이미 1980년대 영미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시대가 만개하면서 그 유명한 '체키니 보고서'가 강조하였듯 유럽의 금융 자본은 유럽 단일 시장이라는 보고(寶庫)를 놓칠 수가 없었다.”
- 총성 없는 시장 전쟁을 이끌어가는 주력 부대는 유럽중앙은행과 각국의 중앙은행이었다. 시장의 행위자들이 흔히 그러하듯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내세워 탈정치성을 강조하면서 개별 국가의 재정 자율성을 현저하게 제약하였다.
- 재정 적자를 GDP 3% 이하로 유지해야만 하는 유로존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 주권을 침탈당하기에 이르렀다.
- 피에르 부르디외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이 유럽중앙은행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스 티트마이어 전 독일중앙은행 총재를 신자유주의의 주범으로 지목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

- 유럽의 시장화 모델이 역설적으로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정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과 거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었다는 아이러니
- 사민당, 녹색당 그리고 유럽의 거대 노조는 더 적극적으로 유럽이라는 사회적 공간으로 뛰쳐나가 '사회적 유럽'을 건설하려는 전략 (하버마스, 발비바르)
- '제3의 길'을 주창하였던 유럽의 현대화된 신 사회민주주의자
- 2007년에 공식 합의된 리스본 조약을 통해 유럽시장의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금융시장화를 전면화하는데 일조
- 반이민 전선에 앞장선 사람은 '프레카리아트(불안정 노동자)
- 금융 시장화의 희생자, 거대 노조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은 포퓰리즘 극우 정당이나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급진적이나 조직화된 노조의 기반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정당

- 브렉시트는 자본주의 위기관리에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자본주의가 민주적 얼굴을 지니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넓은 의미에서) 서유럽 사민주의와 조직화한 노동 운동의 잠정적 패배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유럽 경제 질서의 붕괴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자본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해오는 데 일정한 학습 능력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물론 항상 성공적이진 않다!).
- 브렉시트의 진정한 위험은 시민당, 녹색당 등의 중도 좌파가 주도한 국제 연대의 실험으로서 사회적 유럽 프로젝트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 그렇다고 더 급진적인 좌파의 브렉시트 찬성 의견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은 이미 유럽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주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 2016년 6월 4일자 <가디언>에 기고한 그리스 전 재무부 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영국의 EU탈퇴 반대 의견은 바로 그러한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

- <https://yanisvaroufakis.eu/2016/02/28/is-greece-not-another-compelling-reason-to-vote-for-brexit-on-23rd-june/>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apr/07/brexit-would-be-the-worst-of-all-worlds-says-varoufakis>
- <http://greece.greekreporter.com/2016/05/29/yanis-varoufakis-joins-remain-campaign-against-brexit-video/>



유럽연방공화국 : European Dream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반파쇼운동
- 평화로운 유럽 → 유럽연방공화국
- 하버마스의 꿈(칸트) : 유럽헌법 = 민주주의 헌법
- W. Streeck의 비판 : <민주적 자본주의의 붕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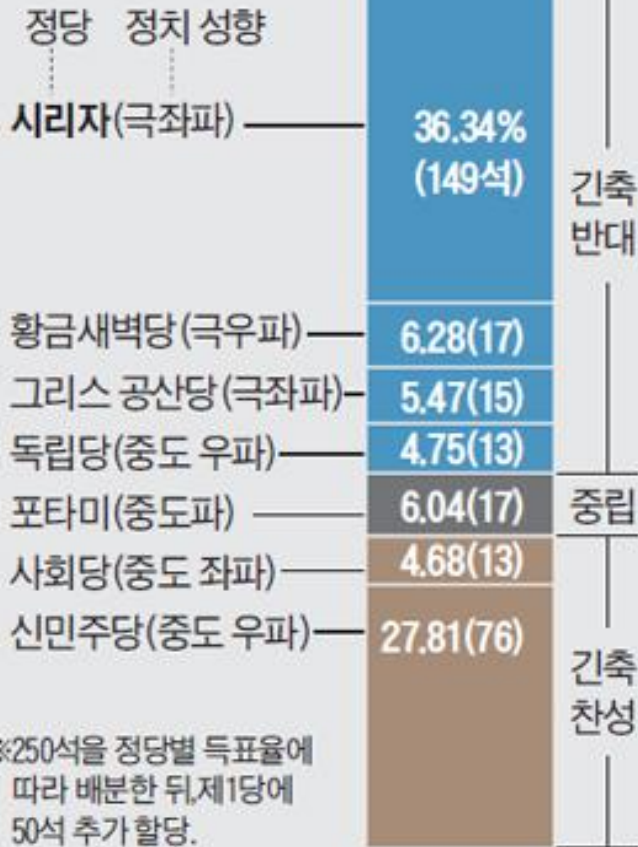
반대표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자 환호하는 그리스 국민들



국제채권단 협상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최종 개표 결과 반대가 압도적 우세를 보이자 반대표를 던진 그리스 국민들이 아테네 중심지의 분수대 난간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 출처: 로이터, 뉴스1, 동아일보 〉

그리스 총선 결과 득표율(의석수)



**‘시리자’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의 총선
승리 이후 주요 발언**

“그리스는 지난 5년간 (긴축의) 치욕과 고통을 뒤로하고 새 역사에 들어섰다.”

“우리의 승리는 긴축에 반대해 온 유럽인의 승리… 트로이카(채권단)는 과거일 뿐”

“긴축이 그리스를 망쳤다… 유럽 지도자와 대등하게 채무 재협상 할 것”



그리스 사태를 이해하는 8단계

1. 논란 안고 유로존 가입

만성 재정 적자국인 그리스가 2001년 출범한 유로존에 포함. 선진 유럽 국가와 같은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



5. 1년도 못 간 반짝 회복세

2014년 연말에 기초 재정수지(국채 이자 지급 제외) 흑자를 발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4년 만에 국제 국채시장에 복귀



2. 그리스발 유럽 금융 위기

그리스의 재정 적자가 2009년 국내총생산 대비 15%까지 확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강등. 재정 위기 발생



6. 좌파 치프라스 정권 등장

2015년 1월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이끄는 좌파 정당 '시리자'가 반(反)긴축정책을 공약으로 들고나와 인기 끌면서 총선 승리



3. 1차 구제금융 지원

2010년 5월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막히자 EU와 IMF가 1100억유로 자금 지원.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최초의 국가가 됨

1100

억유로

7. 채권단의 힘겨루기

채권단은 구제금융을 연장해 주는 대신 연금 삭감, 노동시장 개혁 등 개혁 조치를 요구했으나 치프라스 총리는 거부



4. 2차 구제금융 지원

2011년 10월 그리스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유로존이 1300억유로 규모 2차 구제금융을 제안. 민간 부문 채권 53% 탕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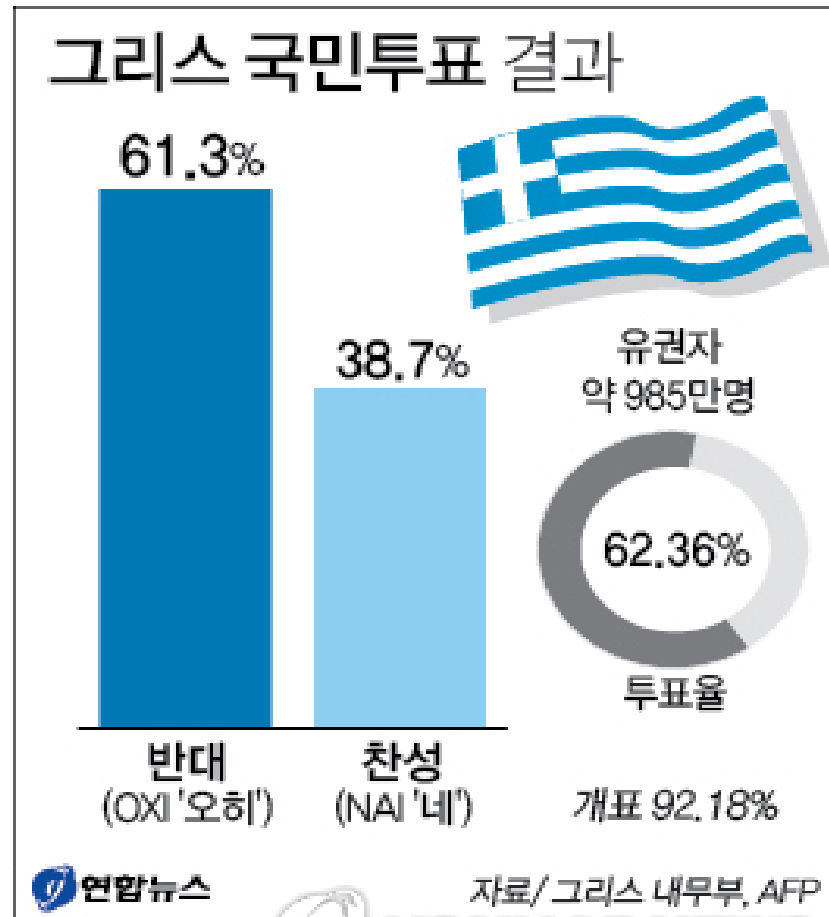
1300

억유로

8. 유로존 탈퇴 기로

6월 24~25일 채권단과의 협상 결렬. 치프라스 총리, 채권단 개혁안을 7월 5일 국민투표에 부치는 승부수를 던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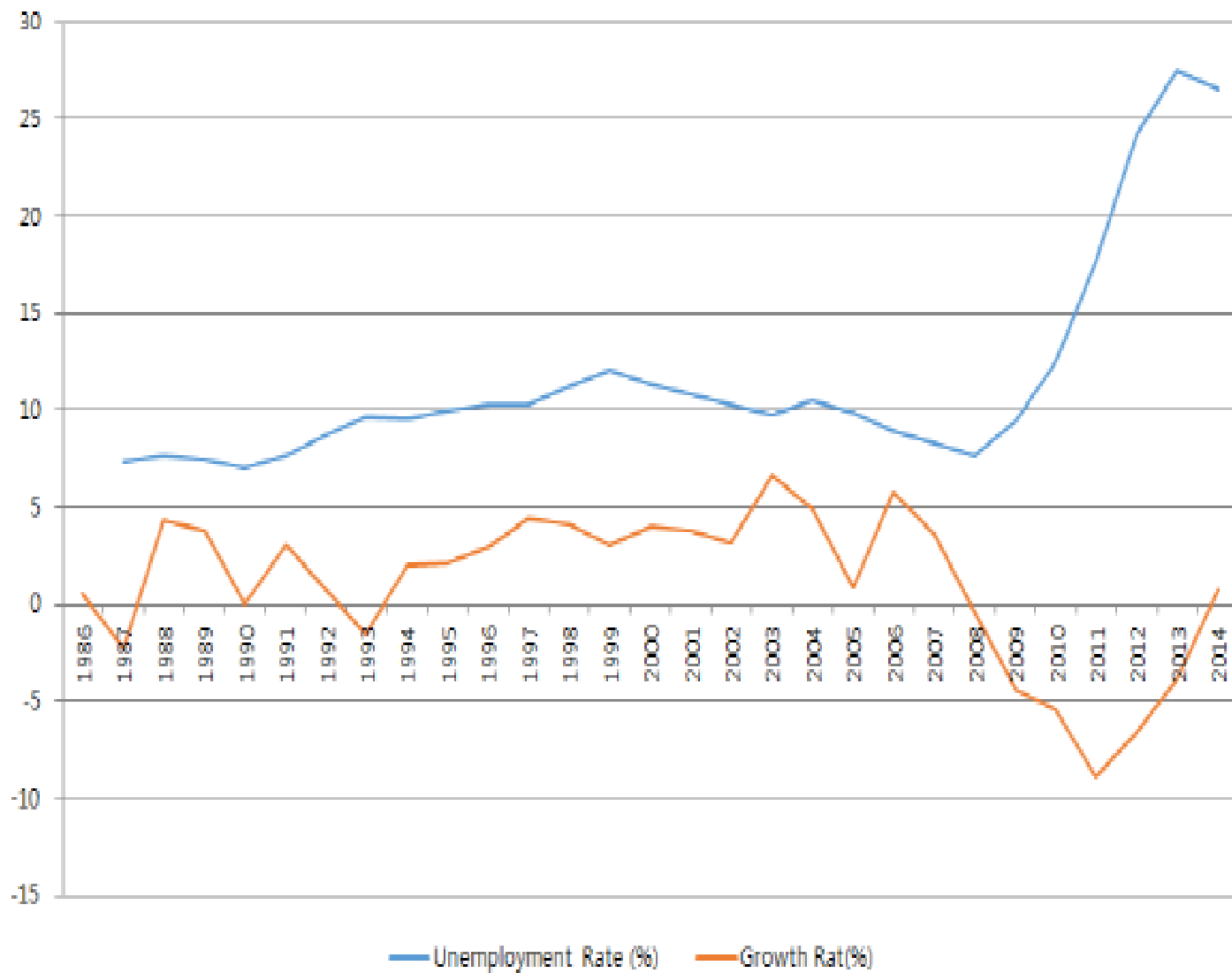
박영석 기자 / 20150706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표1〉 그리스의 조세 징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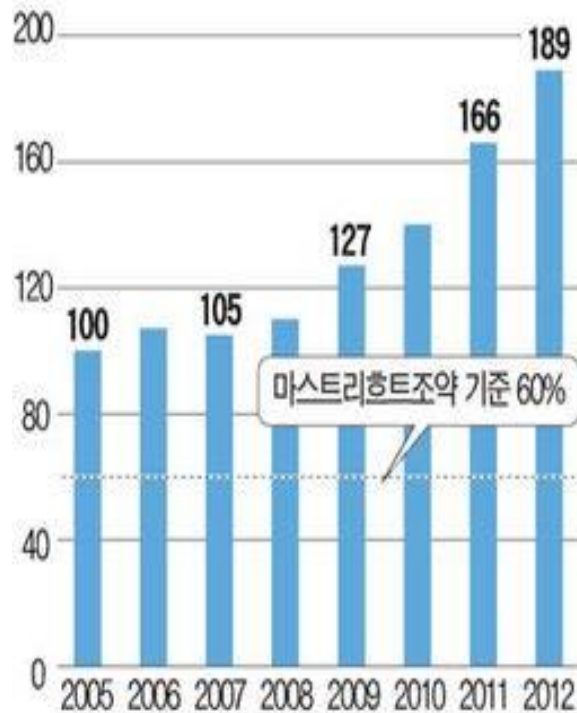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	40.8%	40.7%	38.2%	39.7%	40.9%
조세수입 총액(10억 유로)	90.91	94.83	88.60	90.25	88.07
이자부담(10억 유로)		11.94	11.92	13.19	15.03
GDP 대비 이자 비중		5.1%	5.1%	5.8%	6.99%
GDP 대비 재정적자		-9.8%	-15.6%	-10.3%	-9.1%
GDP 대비 재정적자(이자부담 제외)		-4.7%	-10.5%	-4.5%	-2.1%

* 자료: 그리스 통계청



2011년 그리스의 긴축정책

급증하는 그리스 부채 (단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기준. 2011, 2012년은 추정치 자료:IMF

그리스 긴축안 주요 내용

공공부문 감축

- 공무원 3만명 예비직으로 분류해 1년 내에 다른 자리 나지 않으면 퇴직처리
- 공무원 월급 20% 삭감
- 공무원 월급 1900유로 상한선 설정

연금 삭감

- 한달 연금 1000유로 이상 받는 사람의 연금액 20% 삭감
- 55세 이전 퇴직자 연금 40% 삭감
- 공기업 및 은행 퇴직자 연금 15% 삭감
- 공무원 연금 지급 총액 20~30% 감축 예정

증세 방안

- 소득세 면제기준을 연소득 8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조정
- 부유층에 1~5%의 연대세(solidarity tax) 부과

치프라스 총리 주요 고비





	채권단 요구안	치프라스 총리 수정안	그리스 최종 개혁안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GDP 0.25~0.5%, 내년 GDP 1% 해당 연금 삭감 ·EKAS 2019.12까지 전면폐지 ·소득상위 20% EKAS 당장 지급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12까지 EKAS 순차적 폐지 ·10.31 새 개정안 시행까지 연금제도 개혁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GDP 0.25~0.5%, 내년 GDP 1% 해당 연금 삭감 ·EKAS 2019.12까지 단계적 폐지 ·소득상위 20% EKAS 내년 3월부터 지급 중단
부가 가치세	음식점 23% 부가세 적용, 호텔 상하수도 전기요금 부가세 13% 적용	채권단안 대부분 수용 도서지역만 부가세 30%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점 23% 일괄 부가세 적용 ·도서지역 부가세 인하 폐지 ·법인세 26%에서 28%로 인상 ·TV광고 세금 도입 등
국방비	당장 4억 유로 감축	내년까지 2억 유로, 2017년 4억 유로까지 감축	올해 1억 유로 감축, 내년 2억 유로 감축



"이것은 쿠데타다" 협상안에 분노한 그리스인들

일부 시민은 "그렉시트보다 낫다"... 극심한 내용에 조기 총선론까지 불거져



- ↳ '정치선동' 그리스 총리에 항복 받아낸 독일의 메르켈
- ↳ 그리스, 사실상 '재정 주권' 포기... 결국 빚 탕감도 못받아

90+



메르켈

메르켈과 치프라스의 숨 가뻐던 6개월

치프라스



“그리스의 안전한 유로존 탈퇴 고려”

“대화 기대… 긴축의 원칙은 지켜야”

“플랜B(그리스 디폴트) 준비”

“관대한 조건… 수용하라”

“구제금융을 거부하는 행위”

“바뀐 것 없다… 시간에 쫓기지 않을 것”

“협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플랜B 없다… 앞으로도 멀고 험난”

1월 치프라스 집권

2월 구제금융 협상 개시

4월 EU 정상회담

6월 채권단 구제금융안

6월 27일 그리스 국민투표 선언

7월 5일 국민투표 거부 결과

7월 9일 그리스 구제금융안 제출

7월 12~13일 유로존 정상회의

“메르켈의 유럽은 이제 끝”

“독일 2차대전 배상금 내라”

“충분히 채권단에 양보했다”

“빛만 더 늘어날 것” 거부

“그리스의 주권과 존엄 사수”

“그리스 민주주의 승리… 협상력 상승”

“대폭 양보… 부채 탕감받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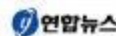
“힘든 결정… 아테네 여론 설득할 것”

그리스 개혁안·채권단 제안 차이점

	그리스 개혁안(7.9)	채권단 제안(6.25)	치프라스 총리 서한(6.30)
부가세	도서지역 할인 제도 조건부 폐지 - 관광지·고소득 지역 우선, 원거리 도서지역 제외 - 부가세 인상에 보전할 재정 조치	도서지역 할인제 폐지	도서지역 할인제 유지
사치세	길이 5m 이상 선박 사치세 부과	길이 10m 이상 선박 사치세 부과	채권단 제안 수용
임대소득세*	연소득 1만2천유로 구간 11%→15% 1만2천유로 초과 구간 33%→35%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법인세*	29%로 1%p 추가 인상	해당 내용 없음	해당 내용 없음
연금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2019년 말까지 폐지 상위 20% 수혜자, 2016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사회연대보조제도(EKAS) 2019년 말까지 폐지 상위 20% 수혜자부터 즉각 폐지	개혁안과 동일
노동관계	올해 4분기까지 단체교섭권 부활 입법완료	올해 말까지 단체교섭 부활 금지	단체교섭권 부활 가을까지 입법



*재정수지 목표 미달시 추가 조치



이재윤 기자 / 20150710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ey.kr/LeYN1



채권단과 합의한 그리스 긴축 개혁안

- 500억유로 국유자산 펀드 설립
 - 음식점 등 부가가치세 일원화
 - 저소득층 및 상위 20% 연금 삭감
 - 일요일 영업 등 소비시장 개혁
-



그리스의 재정적자비율

(단위: GDP 대비 %)



〈자료: EU 집행위원회〉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단위: %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015년 1-8월: 그리스 vs 독일

-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나라들이 그리스 3차 구제금융 안을 최종 승인
- 유로존 국가들이 2015년 7월 말 그것을 승인했습니다.
- 그리스에 3년간 860억 유로(112조)의 구제금융 지원 방안 : 3차 구제금융
- 1백억 유로이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즉시 투입
- 우리나라 1998년 초반 부실은행에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
- 한국은 한국 돈을 투입
- 그리스는 자국 화폐인 드라크마가 없으니, 유로화를 투입
-
- 그리스는 자국 중앙은행이 없고, 자국 화폐가 없다
-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
- 유로화를 사용하는 치명적인 대가

- 독일 기민당의 고압적 태도
- 독일 쇼이블레 장관 :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자
- “독일인이 낸 세금으로 왜 게으른 그리스 인들을 먹여살리냐?”
- 독일 의회가 간신히 그리스 구제금융안을 승인

BLOCKOUT GOES ATHENS



STAND TOGETHER AGAINST AUSTERITY



그리스 : 조만간 4차 구제금융 or EU/Eurozone 탈퇴가 예고?

- ✓ 860억 유로의 구제금융으로 그리스는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에 진 채무를 갚는다
- 860억 유로의 돈은 그리스의 실물 경제에 주입되는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채권국들에 빚 갚는데 대부분 쓰인다
- 그리스인들의 소득/소비, 투자에 쓸 돈은 별로 없다 → 투자/소비 저하 → 경기 하강 → 구제금융

- ✓ 국가 자산 사영화와 헐값 매각
- 독일은 그리스의 항구와 공항, 도로 등 인프라를 해외/독일에 매각하라고 요구하여 관철; 독일 회사들이 그리스의 기간 인프라를 사영화 구입하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 사유화/매각된 항구와 도로 등의 사용료 증가 → 공공요금 인상 → 그리스인들의 소득 저하 → 구제금융

- 더 가난해질 그리스인들에게 빚 갚을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

- → 향후 2년 뒤에는 제4차 구제금융 or 유로존 이탈

하버마스의 비판

- 민주주의와 평화, 우애의 정신으로 출범한 유럽공동체
- EU는 권위주의와 증오, 비이성이 난무하는 대결의 장
- 독일은 그 변화에 책임져야



하버마스 vs Streeck

- 하버마스는 통합유럽을 향한 유럽인들의 정신적 지향성을 만든 장본인 중의 하나
- 2000년대 초에 유럽헌법 창조 : 그 헌법은 민주주의와 인권, 계몽주의와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의 훌륭한 전통을 구현해야 한다고 역설
- 통합유럽이 출범하게 되면 유럽에서 전쟁과 대결의 시대가 사라지고, 유럽의 각국이 서로 소통하는 이성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적 헌정 체제가 만개할 것이라고 기대
- W. Streeck 소장이 “하버마스가 신봉했던 유럽연방이 결국 유럽 대륙의 위기의 뿌리가 됐다”고 힐난
- 순신한 철학자들이 유럽인들에게 ‘유럽통합이 되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설파하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통합 유럽을 밀어준 거였는데,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것

하버마스의 독일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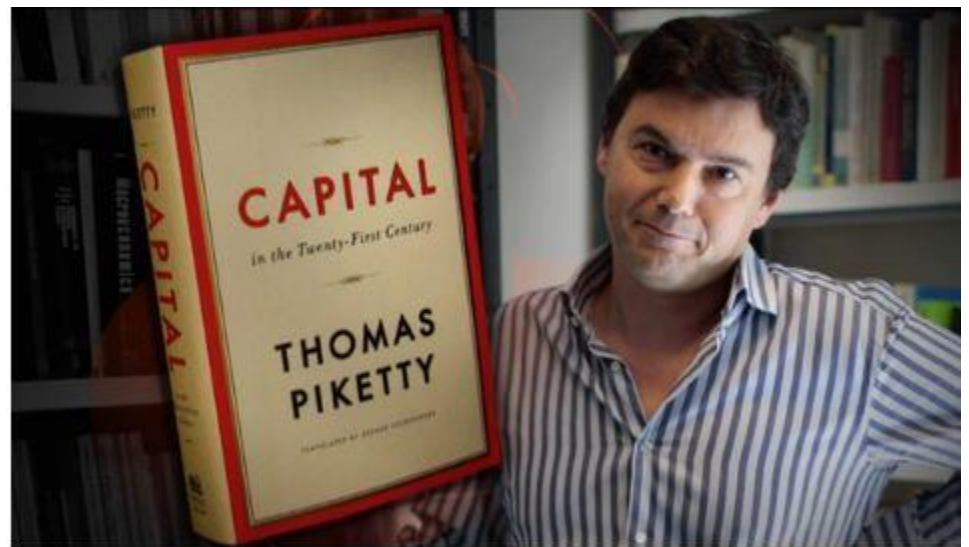
- 독일 정부의 행동은 민주주의와 소통적 이성, 계몽주의를 파괴
- "독일 정부가 독일이 [제2차 대전 이후] 반세기 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하룻밤 새 탕진"
- '독일 최고의 수출품은 메르세데스-벤츠도 폴크스바겐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하다"는 독일 헌법 제1조: 민주적 헌법 정신이 2차 대전 이후 독일을 만들었고, 그런 독일의 헌법 정신이 통합 유럽의 헌법 정신인데, 현재 독일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 "1945년 나치 패망 이후 독일이 그리스와 스페인, 이태리 같은 나라에서 그리고 프랑스 일부에서 독일이 이토록 미움을 받았던 적은 없다. 유로존을 공고히 만들겠다고 하는 독일 정부의 노력이 거꾸로 공동체 그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 인간이 아니라 돈, 사해 동포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로 회귀

메르켈+쇼이블레 : 잔인한 구조개혁/구조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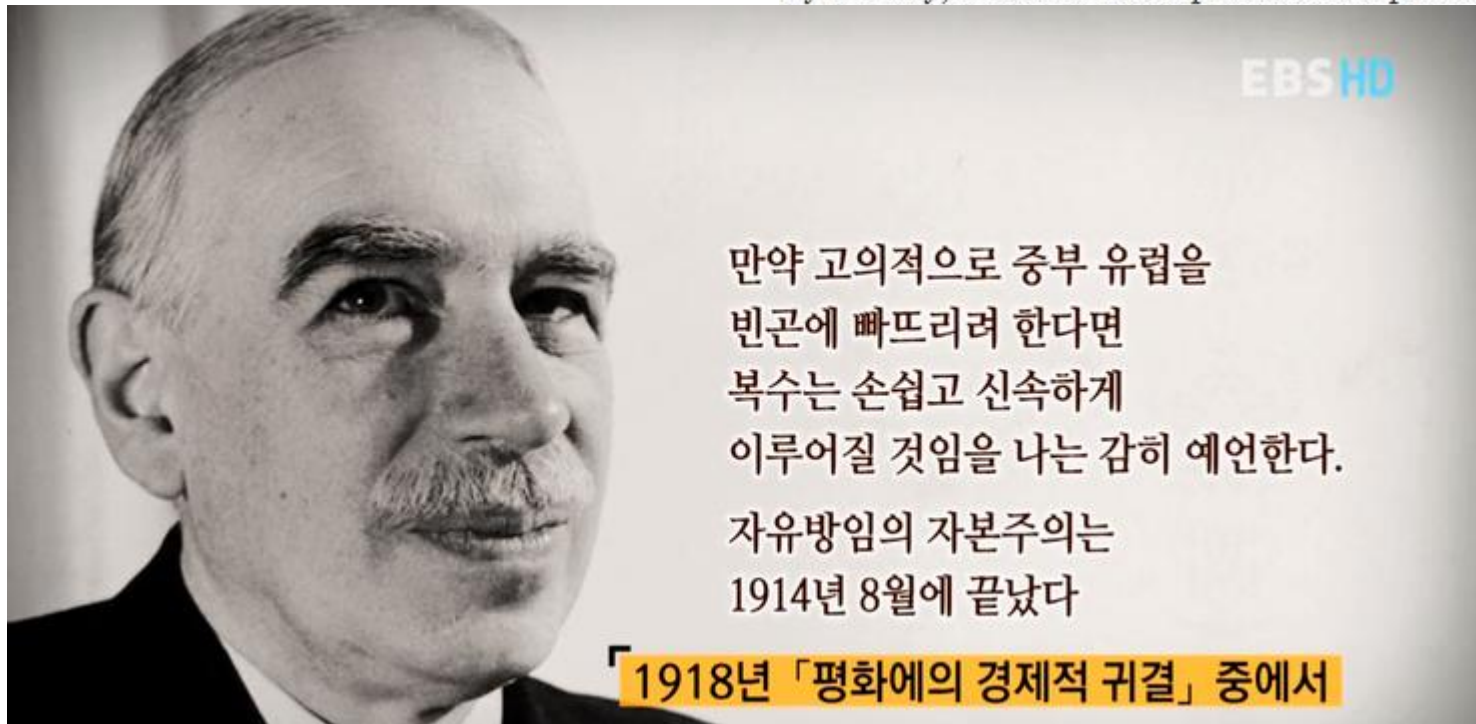
- 메르켈 총리를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한니발에 빗대 : 독일이 EU를 먹어 치우는 만평
-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을 그리스를 참수하는 IS 대원으로 묘사하는 그림
- 그리스 협상과정에 나타난 독일 정치인들과 독일 정부의 이미지: “유럽인들 사이에 사라져가고 있던 과거 독일인들의 추악하고 무정하고 인색한 이미지를 되살렸다”
- 유럽인들, 특히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독일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나라로 인식
- 하바마스: 메르켈과 쇼이블레가 독일인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

긴축 = 베르사이/바이마르 → 전쟁/히틀러

- 프랑스의 <르 피가로>: '독일이 구제금융의 댓가로 그리스에 요구한 구조개혁은 "과거 같았으면 전쟁을 불렀을 정도"'
- 독일의 <슈피겔>: 독일 정부가 주도한 그리스 협상안은 "잔인함의 카탈로그"
- 피케티의 비판: "베르사이 조약 VS 마샬 플랜" (나치 독일의 성장)
- 케인스(레닌)의 베르사이 조약 비판 (1920년): 나치스



By the way, the man himself pronounces it pick a TEA.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

「1918년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 중에서

The Marshall Plan

Promoting Europe's
Unlikely Postwar Recovery

George C. Marshall Foundation

The Marshall Plan, 1948-1951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EU-Eurozone

- 2015년 1월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집권하자 당시 용커 유럽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유럽조약 앞에서는 민주적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발언
- 유럽조약과 유럽집행위원회로 대표되는 현재의 유럽연합이 더 이상 민주주의적인 헌법 체제가 아니라는 하버마스의 비판이 현실을 제대로 표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민주주의의 부흥인 통합유럽의 꿈이 거꾸로 현대판 케사르 체제로;
- 민주공화국 → 로마 황제국
- 그 핵심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정부
- 독일 등 유로존 국가수반들이 자신들의 압도적인 경제적 우월성을 무기로 그리스에게 경제주권 포기 조약을 강요; 그들 역시 앞으로 그리스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 쇠약해진 그리스는 Eurozone 강대국들에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에 서명
- 유럽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채권자 권리와 경제적 패권에 굴복했다는 명백한 사실

적대적으로 분열된 Eurozone

- 2015년 6월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말투로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
- “유로그룹의 긴축 제안은 그리스 민주주의에 가해진 최후통첩이 나 다름없다”
- 그들은 “한 나라의 민족을 모욕했다”
- 그리스 국민들은 시리아 정부를 지지
- 독일 국민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독일 정부를 지지
- 통합 유럽 한 가족이 서로 편 갈라 싸우는 격
- 스페인 포데모스: “우리는 독일의 식민지가 되기 싫다”
- “독일은 EU의 파트너 국가 국민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하라”

유럽연합 VS 미합중국 : 민주주의 공화국은 가능한가?

EU + Eurozone은 지속 가능한가?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파산과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 그리스 국가의 파산과 EU/Eurozone의 재정지원
- 역사도, 정치문화도, 생활수준도, 친구도, 언어도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을 묶은 유럽연합은 연방공화국처럼 행동할 수 있나?
- 역사와 문화, 생활수준이 전혀 다른 독일인들이 과연 그리스인들을 한 식구(하나의 가족: people's home)처럼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가?
- 그리스 구제금융을 놓고 독일인들은 “게으른 그리스인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한다”고 느끼고 있고, 반면에 그리스인들은 “냉혹한 수전노인 독일인들이 내게 궁핍을 강요한다”고 느낀다. 서로 대화와 소통이 안되고 증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통화통합 → 재정통합?

- 하버마스 = 소로스 = P. 크루그먼 = M. Feldstein = 스티글리츠
- 유럽연합 그 자체가 잘못된 프로젝트는 아니다. 문제는 한쪽 다리가 없는 절름발이로 출발한 유로화; 유로화의 제도적 불안정성이다. 유럽 연방은행만 있고 연방재무무도 연방 국세청도 없다. 유로화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바탕이 없다
- 단일 통화(통화통합)에서 재정통합(조세권 + 예산권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 유럽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을 설립해야; 유럽연방 부가가치세 (매출액의 5%)를 신설해야
- 정치적으로도 연방국으로 재편되어야: 인권과 민주주의, 이성을 핵심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 헌정 체제가 통합 유럽에서 일관되게 관철되려면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유럽연방, 유럽합중국으로 나아가야
-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2~3 개의 EU/Euro로 분리?

- 생활/소득 수준의 차이 = 생산성의 차이
- 서유럽 VS 동유럽; PIIG VS Core 유럽
- FTA 비판 : 미국/유럽과 한국의 생산성 격차

- 최적 통화 이론

- 금본위제로 인한 세계대공황(1930년대)